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이춘희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지원단장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필요성

21세기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balization의 시대로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가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인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발전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수도권은 과밀화와 비대화를 거듭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도권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7.2%인 2,28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본 32%, 프랑스 18.7%, 영국 12.2%, 미국(뉴욕) 7.7%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집중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또한 수도권에는 인구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57%, 공기업 본사의 83.2%, 100대 기업 본사의 91%, 20대 주요대학의 76.3%, 중앙행정기관의 80%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9.2조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되고, 생활하수·대기오염물질·폐기물 처리를 위해 연간 4조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 제일주의'라는 의식의 폐단을 낳았다.

이러한 '서울 제일주의'는 지역간 갈등 및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켰고, 지역간 경쟁 및 다양성을 제약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지 않은 채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는 수도권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행정부 및 관련기관의 인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직접적인 과밀완화 정책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구조 개편을 위한 대역사이다.

모든 면에서 서울중심이었던 사회·공간구조의 일부를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다양한 구조로의 이행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현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적 과업이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신행정수도 건설과 정부혁신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이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문,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협력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 추진기반을 강화하며, 중앙의 권한을 간소화하여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권형 국가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도 분권형으로 전환하

고, 부처별로 '서비스 스탠더드 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의 재정력 및 공무원 역량 강화로 자치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민투표제 도입 등으로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대폭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권의 중심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1~2 시간 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분산·분권·분업을 통한 자원의 최적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방대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특성별 지방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중소도시는 지역의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도시, 대학도시 등 전문기능도시로 특화시켜 다핵의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을 특성화 산업의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업보육 기지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을 우리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삼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외의 양호한 IT 인프라와 시장기회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분업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 및 R&D 센터를 유치하고, 노동·금융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을 위한 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경제중심지로서 기대되는 수도권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규제 등 관련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성공적 수행은 대한민국을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금년 4월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을 발족한데 이어, 5월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지원단은 후보지 조사, 특별법 제정 등 실무작업을 수행하며, 자문위원회는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03년 말까지는 준비단계로서 신행정

수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면서 후보지 선정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는 계획단계로서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하고, 환경·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용지매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건설단계인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는 신행정수도 부지 조성, 공공청사 건축,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 기간 중에 신행정수도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는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마련

신행정수도의 밑그림과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입지선정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에는 신행정수도의 이미지, 상징성, 미래상뿐만 아니라 이전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도시규모 및 형태, 환경성 확보 방안, 광역적 도시관리 방안, 자원조달 방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이전기관 종사자 및 현지주민 지원대책 등이 포함된다.

지난 5월 국토연구원 등 10개 전문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에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는 수시로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확정지를 계획이다.

현황조사 및 후보지 선정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위성사진,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한 도상(圖上)조사를 통하여 표고·경사도 등 물리적 지표를 토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조사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댐상류 지역·백두대간 등 주요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등은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6월말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토지이용, 생태 등 현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DB로 구축할 예정이다.

2004년 상반기 중 입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2004년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

77년에 제정된·임시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추진기구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조치법안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구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단」설치하고, 추진위원회가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요재원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전기관종사자 주거대책 등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대책

신행정수도 후보지 소문이 있는 대전, 천안 등 일부 충청권 지역에서 집값과 땅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이미 대전시·연기군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17)하였고, 충청권 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한 사람의 명단(3만 750명)을 국세청에 통보(5.19)하였다.

또한 대전시·천안시·청주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2.27, 6.11)하고, 대전시·청원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6.7)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후보지 공개시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보상을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가 상승을 노린 토지매입을 억제하며, 충청권의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

사업추진 초기단계에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

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 주민에게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 수도권 과밀이 완화되면 수도권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규제완화가 가능하여 기업 환경이 개선되므로 수도권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충청권 지역 주민에게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에서 객관적 입지선정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할 것임을 홍보하고 비충청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각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중심으로 육성하며, 245개 공공기관 역시도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 밖에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방송, 공청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외국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례 및 교훈

외국의 많은 나라들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자국의 수도를 이전하였는데, 여기서 몇 개 국가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브라질은 내륙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리아로 새로운 수도를 건설·이전하였고 그 결과 국가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수도 주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할 것임을 홍보하고 비충청권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각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중심으로 육성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호주는 연방국가 성립에 따른 상징수도 건설 필요성에 따라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7개 도시섹터를 녹지로 분리하여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고 녹색수도를 건설하여 도시경관은 매우 아름다우나, 주민 생활환경이 불편하고 도시활력이 다소 부족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상징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였으나, 18개 부처 중 서독의 전 수도 본에 8개 부처를 남기고 베를린에 10개 부처만 이전하여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도 동경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및 경기침체로 3개 후보지(북동, 동해, 미에·기오 지역)중 최종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편이다.

이상 살펴 본 외국의 수도 이전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추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수립과 함께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지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해야 하며, 신행정수도는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모습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인간적인 여유와 활력이 넘치고 생태보전 및 자원절약의 모범을 보이는 인간중심의 친환경도시, 한국 고유의 건축미가 돋보이고 전통문화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재해와 사고가 없는 안전한 첨단도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 지향도시로 건설해 나가고자 한다. ☺